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사진부

발 신 시민개헌넷 (담당 : 이재근 공동운영위원장 010-9727-4035 pp@pspd.org)

제 목 [보도자료] 11/04 개헌특위 구성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26. 11. 4. (수) (총 5 쪽)

보 도 자 료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 구성하고, 개헌절차법 추진하라

일시 : 2026년 11월 4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이미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나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회는 10월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였고, 이제 예산과 입법을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지난 9월의 교착상태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난 9월 개헌을 둘러싸고 벌어진 현직 대통령의 연임 논란은 개헌 논의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었습니다. 불신의 벽을 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국회는 개헌특위 구성조차 논의하고 있지 못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말 당대표 직속으로 개헌추진단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5월에는 지방선거동시개헌에 반대하며 하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꾸리자고 제안했지만, 말을 바꿔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어깃장을 놓았으며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 말조차 못 믿는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등 이미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39년 전인 1987년 개정된 뒤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생명권과 안전권, 돌봄권, 정보기보권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춰 기본권을 다시 정비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개헌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민개헌넷은 개헌 논의의 가로막고 있는 거대 정당과 국회에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 이에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은 202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되는 오늘(11/4)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즉각 구성과 개헌 논의 개시를 촉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2. 개요

- 제목 :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 구성하고, 개헌절차법 추진하라
- 일시 : 2026. 11. 04. (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 발언자와 주요 순서
  - 사회 : 이재근 시민개헌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자치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인사말 : 한상희 시민개헌넷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 개헌특위 구성촉구 발언 : 오연경 시민개헌넷 운영위원(흥사단)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보경 시민개헌넷 간사

※ 발언자와 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귀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 텔레그램 소식채널

▣ 붙임 **:** 기자회견문

▣ 붙임 : 기자회견문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 구성하고, 개헌절차법 추진하라

국회의장이 개헌의 추진을 공언한지 4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어떤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었던 자신의 연임이 개헌으로 불가하다는 명확한 입장을 공언했지만, 국회는 개헌에 대해 침묵을 넘어 방치하고 있다. 개헌특위, 개헌자문위 등은 구성되지 않았고, 공론화와 시민참여를 위한 개헌절차법은 심의되지 않고 있다.

12.3 내란으로 흔들린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의 도래 등 새로운 시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미 뚜렷한 한계가 드러난 현행 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드는 혐오와 차별을 막아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 보장,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통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기초인 헌법이 새 시대에 맞게 개정되어야한다. 개정한 지 39년된 헌법을 바꾸자는 과제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이자, 시민들의 주권을 진정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이다.

헌법의 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은 시민임에도 지금껏 헌법은 권력자들에 의해 쓰여졌다. 지금 국회가 최소한의 기구조차 구성하지 않고 개헌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개헌 과정에 시민의 최소한의 참여조차 가로막는 것이자 시민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충분한 이해와 토론이 필요한 개헌의 과정부터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개헌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지금 국회의 행태는 개헌의 책무를 방기하고 방해하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12.3 내란 이후 새로운 정부 출범 전후, 국회와 제 정당은 앞다퉈 개헌을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한 바 있다.그럼에도 현재까지 개헌의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조차 설립하지 않는 국회의 행태는 개헌을 통한 개혁을 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될 지경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더이상 개헌논의를 미루지 말고 개헌특위를 즉각 설치하라 !

하나. 권력자가 아닌 시민이 쓴 헌법을 만들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 등 절차를 마련하라 !

하나. 국회는 더이상 개헌을 방치말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라 !

2026년 **11**월 **4**일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